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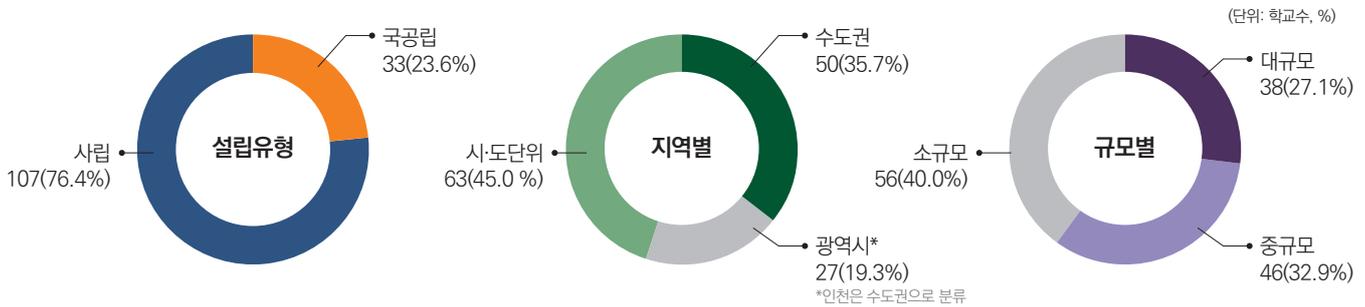
2025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I)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 박상규
담 당 |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김흔 연구원, 지준오 팀장
문 의 | 02-6919-3814
발행일 | 2025. 1. 16.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 2024년 12월 5일(목) ~ 26일(목)
- **조사방법** :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 회원대학 192개교* → 140개교 응답(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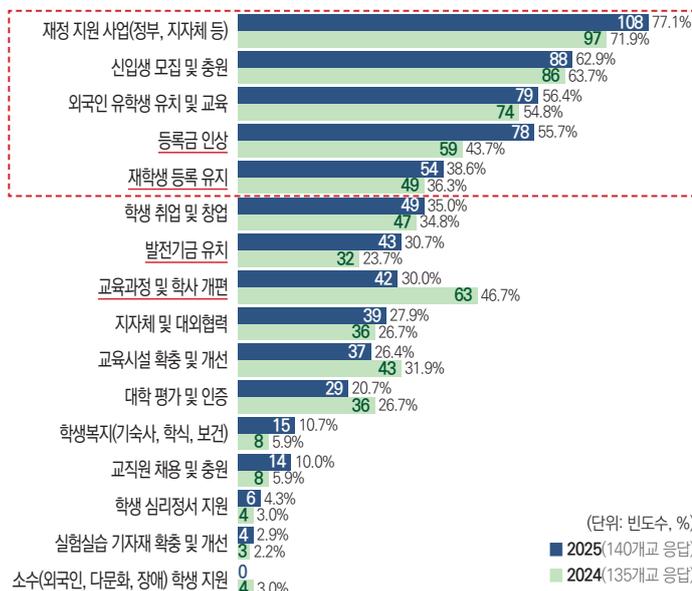
* 문항특성상 특별대 5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II.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7.1%(1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2.9%(88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56.4%(79명), '등록금 인상' 55.7%(78명), '재학생 등록 유지' 38.6%(54명) 순으로 나타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1, 2위로 변동 없음. 다만, 1위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은 '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RISE 체계의 본격 도입 등으로 5.2%p 상승(71.9→77.1)함
 - 또한, '등록금 인상'이 큰 폭으로 상승(전년 대비 12.0%p ↑, 43.7→55.7)하였고, '발전기금 유치'는 7.0%p 상승(23.7→30.7)하여 7순위로 올라왔으며, '재학생 등록 유지'가 5순위로 진입함. 반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16.7%p 하락(46.7→30.0)하여 4순위에서 8순위로 물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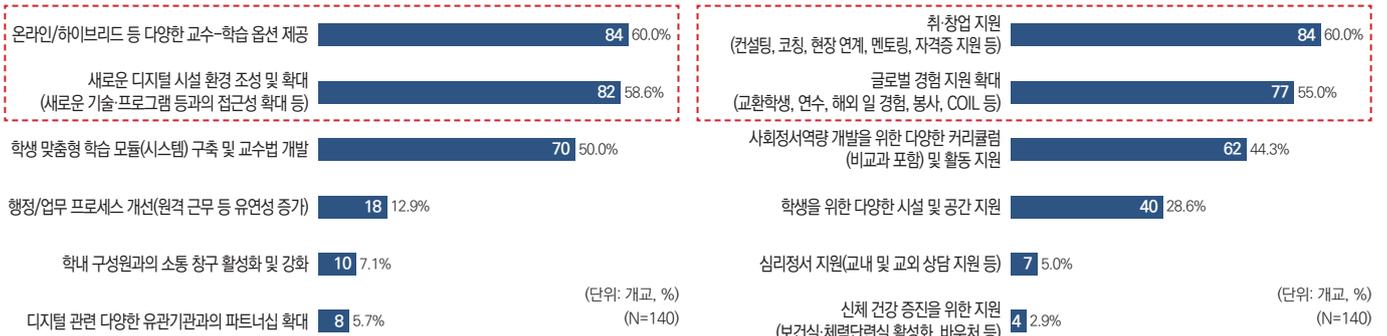
[그림 2]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2024년도 대비)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에 따른 관심 영역은,
 - 국공립과 사립의 관심은 '재정지원사업'과 '등록금 인상' 외에는 다르게 나타남
 -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인상' 2위, '발전기금 유치' 3위로 나타남
 - 시도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1위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 대학은 5위, 국공립대학은 순위에 들지 않음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설립유형, 지역별 우선순위(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1	1	1	2
신입생 모집 및 충원	2		2	5	3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3		3	3	2	3
등록금 인상	4	5	4	2	4	4
재학생 등록 유지	5		5		5	5
학생 취업 및 창업		2				5
발전기금 유치				3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3				
지자체 및 대외협력		4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5				

III. 대학의 디지털 혁신과 학생을 위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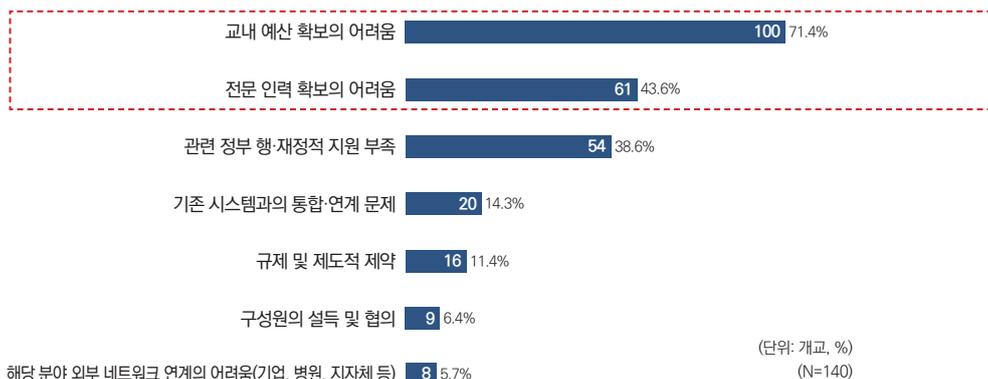
[그림 3] 디지털 혁신을 위한 노력

[그림 4] 향후 학생을 위한 집중 투자 분야

<표 2> 설립유형별 대학의 디지털 혁신과 학생을 위한 투자(상위 2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디지털 혁신노력	온라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교수-학습 옵션 제공	1	2	1
	새로운 디지털 시설 환경 조성 및 확대(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등과의 접근성 확대 등)	2		2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및 교수법 개발		1	
학생을 위한 집중 투자 분야	취·창업 지원(컨설팅, 코칭, 현장 연계, 멘토링, 자격증 지원 등)	1		1
	글로벌 경험 지원 확대(교환학생, 연수, 해외 일 경험, 봉사, COIL 등)	2	1	2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		2	

-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 '온라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교수-학습 옵션 제공'(84개교, 60.0%)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2위는 '새로운 디지털 시설 환경 조성 및 확대'(82개교, 58.6%), 3위는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및 교수법 개발'(70개교, 50.0%)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은 1위가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및 교수법 개발'로 나타남(<표 2> 참조)
- 학생들을 위한 향후 집중 투자 분야는,
 - '취·창업 지원(컨설팅, 코칭, 현장 연계, 멘토링, 자격증 지원 등)'(84개교, 60.0%)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2위는 '글로벌 경험 지원 확대'(77개교, 55.0%), 3위는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62개교, 44.3%)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은 '글로벌 경험 지원 확대' 1위,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이 2위로 나타남(<표 2> 참조)
- 디지털 혁신과 학생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교내 예산 확보의 어려움'(100개교, 71.4%)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2위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는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그림 5] 디지털 혁신과 학생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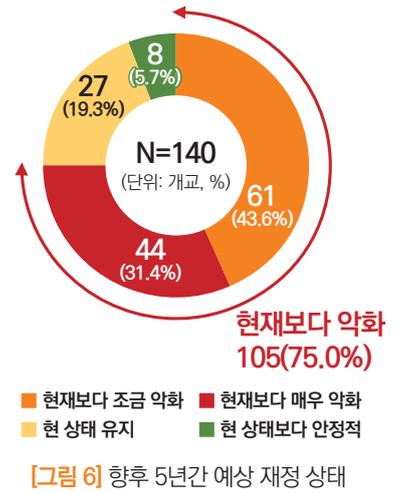
IV.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

○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이 105개교(75% / 현재보다 조금 악화 61개교, 매우 악화 44개교)로 나타남
- 이어, '현 상태 유지'를 예상한 대학은 27개교(19.3%) 나타남. '현 상태보다 안정적'으로 예상한 대학은 8개교(5.7%)로 나타났는데, 광역시 대학은 없음

○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향후 5년간 예상 재정 상태는,

- 전체 유형 중 국공립 대학이 81.8%(33개교 중 27개교)로 가장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 지역별은 비수도권인 광역시(27개교 중 21개교)와 시도단위 대학(63개교 중 49개교)이 77.8%, 규모별은 소규모 대학이 76.7%(56개교 중 43개교)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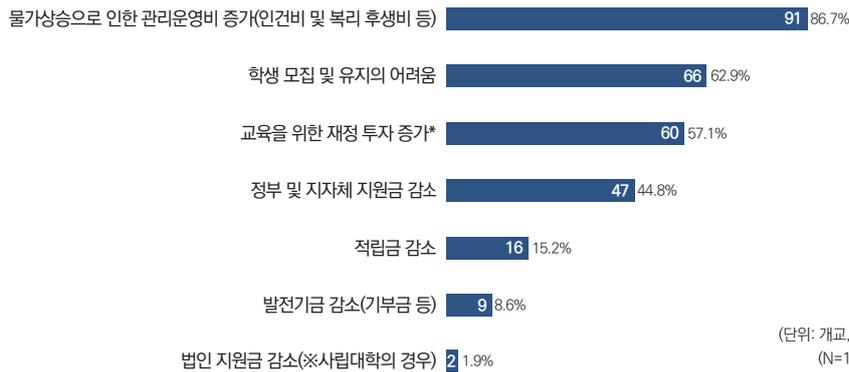
〈표 3〉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향후 5년간 예상 재정상태

(단위: 개교, %)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응답교	140	33	107	50	27	63	38	46	56
현재보다 조금 악화	61(43.6)	13(39.4)	48(44.9)	22(44.0)	12(44.4)	27(42.9)	15(39.5)	21(45.7)	25(44.6)
현재보다 매우 악화	44(31.4)	14(42.4)	30(28.0)	13(26.0)	9(33.3)	22(34.9)	14(36.8)	12(26.1)	18(32.1)
현 상태 유지	27(19.3)	4(12.1)	23(21.5)	12(24.0)	6(22.2)	9(14.3)	7(18.4)	10(21.7)	10(17.9)
현 상태보다 안정적	8(5.7)	2(6.1)	6(5.6)	3(6.0)	0(0.0)	5(7.9)	2(5.3)	3(6.5)	3(5.4)

○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105개교에서 응답한 재정 악화 이유는,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가 91개교(86.7%)로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 2위,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가 3위로 나타났고, 국공립,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2, 3순위가 전체와 다른 양상을 나타냄(〈표 4〉 참조)



〈그림 7〉 재정상태 악화 이유

〈표 4〉 재정상태 악화 이유(상위 3개)

(단위: 개교, %)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	1	1	1	1	1	1	1	1	1
학생 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	2		2		3	2		2	2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	3	2	3	2	2	3	2	2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감소		3		3	3		3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V.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 140개 응답 대학 중, 98개 대학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함
-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총 9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1위(43개교), ‘과감한 자율성 부여(입시, 등록금, 기부금제 등) 및 규제 완화’가 2위(39개교),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및 지원(기초학문 관련 등)’이 3위(20개교)로 제안됨
 - 수도권, 소규모 대학은 ‘과감한 자율성 부여(입시, 등록금, 기부금제 등) 및 규제 완화’가 1위로 제안됨(표 5) 참조)



[그림 8]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정책적 지원

- 기타 의견으로는 ▲적정 규모화 및 구조조정, ▲한계대학 퇴로 마련 및 활용 정책 필요, ▲학생 주도의 교육정책 참여권 부여, ▲대학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이 있음

[표 5]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정책적 지원 순위(상위 3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	1	1	1	2	1	1	1	1	2
과감한 자율성 부여(입시, 등록금, 기부금제 등) 및 규제 완화	2	2	2	1	3	2	2	2	1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및 지원(기초학문 관련 등)	3	3			2	3		3	3
지방정부와의 상생 협력 강화(RISE관련 정책 등)			3			3		3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				3			3		

Remark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안정적 재정 확충 및 과감한 자율성 부여 필요

-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1위, 2위로 초점이 맞춰졌으며, ‘등록금 인상’, ‘발전기금 유치’ 등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급변하고 있는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교수-학습 옵션 제공’이 1위, 학생들을 위한 향후 집중 투자 분야는 ‘취·창업 지원(관련 컨설팅, 코칭, 현장 연계, 멘토링, 자격증 지원 등)’이 1위로 나타나는 등 학생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디지털 혁신과 학생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향후 5년간 재정 상태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대학이 105개교(75%)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설립별로는 국립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대학이,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재정 악화를 우려함. 또한 재정 악화 이유(105개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가 91개교(86.7%)로 1위,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이 66개교(62.9%)로 나타남
-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1위, ‘과감한 자율성 부여(입시, 등록금 등) 및 규제 완화’가 2위로 제안됨.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대학이 유연하고 신속한 혁신과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 등이 선제 되어야 함